

주간 통일정세

2017-02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1.7	‘현지시찰·공항사열’…北 ‘2인자’ 최룡해 광폭행보(연합뉴스) 北매체, 위성 연이어 날아오를 것…장거리로켓 위협(연합뉴스)	
	1.8	北김정은, 경공업공장 시찰…새해 두번째 민생행보(연합뉴스) 김정철, 북한 내 지위·역할 없어…태영호 前공사 문답(연합뉴스) 김정은 공포정치 첫 희생자 리영호, 도청에 걸려 처형(연합뉴스) 건강검진 상상도 못해…태영호 공사가 전한 北외교관 실상(연합뉴스) 北, 김정은 생일 경축행사·보도·도발 없었다(연합뉴스) 北 외무성, ICBM 임의의 시각·장소서 발사될 것(연합뉴스)	
	1.9	北, 김정은 신년사 관철 각 부문 연석회의 열어(연합뉴스)	
	1.10	김정은 대외활동 감소세 뚜렷…제재 이후 경제행보 주력(연합뉴스) 北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서 러시아어 서비스 시작(연합뉴스) 北신문, 극기훈련급 근로환경 ‘모범사례’로 선전(연합뉴스) 北매체 “김정은 자책성 발언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주장(연합뉴스)	
	1.11	北최룡해, 니카라과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현지 도착(연합뉴스) 北, 백두산에 김씨 3부자 우상화 기념비 세우기로(연합뉴스) 北, 김정은생일 민족명절 내부지시…지역따라 소규모 선물(연합뉴스) 자본주의는 흉내못내…北, 유엔제재받은 조각상 수출 홍보(연합뉴스) 北매체 “반기문 당선되면 핵전쟁 위협 고조” 주장(연합뉴스)	
	1.12	北김정은, 김치공장 시찰…인민생활 향상에 총진군(연합뉴스) 北매체 “최룡해 특사, 니카라과 대통령 취임식 참석”(연합뉴스) 北 최희철 외무성 부상 방중…여러 나라 대사 만날 듯(연합뉴스) ‘폐쇄 국가’ 북한, 중국 SNS 통해 체제 홍보 나서(연합뉴스) 北, 김정은 인민관 체질화해야…간부 기강 잡기(연합뉴스) 北, 김일성 삼촌까지 끌어들이 ‘김정은 충성’ 독려(연합뉴스) 北 “친미사대는 재앙, 친북 동족은 통일번영의 길”(연합뉴스)	
	1.13	北, 김정은 결심이 곧 우주개발 목표…우주정복 활로 열것(연합뉴스) 北, ‘고별연설’ 美오바마에 “패자의 몰골” 악담(연합뉴스)	
	경제	1.11	대북제재로 인한 北 외화수입 손실규모 2억달러(연합뉴스)

사회 문화	1.7	北청년들, 김정은 '친위부대' 지원 기피(연합뉴스)
	1.12	북한군 기강해이 극심...부대 철문 떼가고 전단 뿌리고(연합뉴스)
		북한서 남한 식재료·주방기구 유행...南드라마 영향(연합뉴스) 데일리NK, 북한 평남서 옮겨올 첫 AI 발병(연합뉴스)
1.13	北, 4월까지 국경경비대 특별경비기간...탈북자 차단(연합뉴스) 北주민 대다수가 한 달에 한 번은 외국매체 접해(연합뉴스)	
외교 국방	1.7	중국 일부 지방정부, 새해 대북사업 적극 추진(연합뉴스)
		美전문가들, 北 5차핵실험 기폭지점 지하 800m이상 추정(연합뉴스)
	1.8	北 핵·미사일 개발 '속도전'...연말까지 ICBM 개발 목표(연합뉴스)
	1.9	美, 北ICBM 발사위협에 "확장억지력 포함 동맹 철통방어"(연합뉴스)
		美·북, 北ICBM 위협에 "탄도미사일 방어능력 개선중"(연합뉴스)
		카터 美·북 "北미사일, 美·동맹 위협하면 격추할 것"(연합뉴스)
		중국, 북한 ICBM 발사 위협에 "깊이 우려"(연합뉴스)
		北외교관 밀수 4억원짜리 톨스로이스, 방글라데시 세관에 압수돼(연합뉴스) 교황 "北 핵실험, 핵무장 경쟁 유발"...중단 촉구(연합뉴스)
	1.10	北, 아주 잔혹한 정권중 하나...트럼프, 北에 단호하게 나갈것(연합뉴스)
		백악관, 美·동맹국 방어능력 확고...필요시 사용할 준비돼(연합뉴스)
		페리 전 美·북, 北 미사일 시험 막아야...격추도 한 방법(연합뉴스)
	1.11	美·북방장관 "北ICBM, 위협 안되면 격추까지 필요없어"(연합뉴스)
		美공화의원, 국방장관에 北ICBM 저지할 무력사용권 줄 것(연합뉴스)
北 유엔분담금, 전체 유엔 예산의 0.005%(연합뉴스)		
교도통신 "北, 유엔에 제재결의 근거 검증 조직 설치 요청"(연합뉴스)		
日방위상, 北 ICBM 실용화 못해...대기권 재진입기술 검증안돼(연합뉴스) 국방백서에 '핵탄두' 'ICBM' 첫 언급...핵미사일 '전략군' 1만명(연합뉴스)		
1.12	떠나는 오바마 각료들, 트럼프에 일제히 "북핵은 우선사안"(연합뉴스)	
	美, 北미사일 감시 위해 해상기반 X-밴드레이더 배치(연합뉴스)	
1.13	바이든 "북한 핵·미사일, 국제안보에 집중하는 위협"(연합뉴스)	
	美CIA국장 내정자, 北 사이버기술 향상...공격적 작전 가능(연합뉴스)	
	주러 北대사, 현지언론 인터뷰서 "임의시각에 ICBM 발사가능"(연합뉴스)	

■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도 일자	보 도 내 용	수 행 자	비 고
1.8.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새로 꾸린 이불생산공정과 노동자 합숙소 방문	안정수, 조용원, 박명 순	
1.12.	류경김치공장 방문	오수용, 안정수, 조용 원, 신만균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1. 8.

■ 北김정은, 경공업공장 시찰...새해 두번째 민생행보(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표적 경공업공장인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시찰 하면서 새해 두번째 민생행보에 나섬.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새로 꾸린 이불생 산공정과 새로 건설된 노동자합숙(소)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8일 보도함.
- 김정은의 이날 시찰은 안정수 당 중앙위원회 부장, 조용원·박명순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등이 수행함.

2017. 1. 10.

■ 김정은 대외활동 감소세 뚜렷...제재 이후 경제행보 주력(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공개 대외활동이 2013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10일 통일부가 노동신문 보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정은의 공개활동은 2012년 151회에서 2013년 212회로 늘었다가 2014년 172회, 2015년 153회, 지난해 132회로 감소함.
-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는 자신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공개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권 안정에 자신감이 있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개활동 전체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힘.

2017. 1. 12.

■ 北김정은, 김치공장 시찰...인민생활 향상에 총진군(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최근 개조 공사를 마친 평양시 외곽 류경김치공장을 시찰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나라 김치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류경김치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고 밝힘.

- 김정은의 이날 시찰은 오수용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안정수 당 중앙위원회 부장, 조용원·신만균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등이 수행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1. 7.

■ ‘현지시찰·공항사열’…北 ‘2인자’ 최룡해 광폭행보(연합뉴스)

- 새해 들어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연일 현지시찰에 나서고 공항에서 의장대를 사열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최룡해 부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육성 신년사를 통해 자책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몸을 잔뜩 낮춘 시점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음.
-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등 북한의 주요 매체는 최룡해 부위원장이 7일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니카라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상황을 일제히 보도함.

2017. 1. 8.

■ 김정철, 북한 내 지위·역할 없어…태영호 前공사 문답(연합뉴스)

- 북한 외교의 최일선에서 활동했던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 열정적이고 직설적으로 응함.
- 태 전 공사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친형인 김정철에 대해서는 “김정철이 아무리 (김정은의) 형이라고 해도 그 어떤 역할이나 지위, 성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함.
- 그는 2015년 김정철이 기타리스트 에릭 클랩턴의 런던 공연장을 찾았을 때 동행한 바 있음.

■ 김정은 공포정치 첫 희생자 리영호, 도청에 걸려 처형(연합뉴스)

-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전 공사는 2012년 7월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이 숙청된 배경에 대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이 도청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8일 밝힘.
- 태 전 공사는 서울 연합뉴스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에선 직급이 올라가

면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속박된다”며 “리영호도 도청에 걸려서 죽었다”고 밝힘.

- 그간 리영호가 처형됐다는 언론 보도는 나온 적이 있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된 바 없음. 이런 상황에서 북한 고위급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전 공사의 발언으로 리영호 처형설에 무게가 실리게 됨.

■ 건강검진 상상도 못해…태영호 공사가 전한 北외교관 실상(연합뉴스)

- 태영호 전 주(駐)영국 북한대사관 공사가 8일 박봉과 지원 미비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 외교관들의 생활 실태를 전함.
- 태 전 공사는 서울 연합뉴스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 외교관이) 정상적으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다”고 밝힘.
- 그는 북한 외교관의 처지를 강도가 목에 칼을 들이댄 상황에 비유하며 “공식 활동에서 상대방이 김정은을 헐뜯는다면 모든 여력을 다해 (김정은을) 옹호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금방 목이 날아가는 것”이라고 말함.

2017. 1. 11.

■ 北최룡해, 니카라과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현지 도착(연합뉴스)

-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니카라과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현지에 도착했다고 북한 매체가 11일 보도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김정은 동지의 특사인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동지가 니카라과 공화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9일 수도 마나과에 도착했다”고 밝힘.
-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최룡해는 지난 6일 평양을 출발했으며, 당시 공항에서 의장대를 사열하는 등 사실상 ‘정권 2인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함.

2017. 1. 12.

■ 北매체 “최룡해 특사, 니카라과 대통령 취임식 참석”(연합뉴스)

-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로 니카라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12일 보도함.
- 중앙방송은 “김정은 동지의 특사인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동지가 10일

- 수도 마나과의 혁명광장에서 진행된 니카라과 공화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했다”고 전함.
- 북한은 우리나라의 대북 고립 외교에 맞서 지난해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장례식에 참석했던 최룡해를 앞세워 중남미 우호국들과 관계 유지에 힘쓰고 있음.

■北 최희철 외무성 부상 방중...여러 나라 대사 만날 듯(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에서 아시아 지역 등을 담당하는 최희철 부상이 12일 항공편을 이용해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최 부상이 베이징에 주재하는 복수의 국가 대사들과 면담하고 북한의 올해 방침 등을 설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베이징 국제공항에 도착한 최 부상은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음. 통신은 리대성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동행했다고 전함.

다. 공식행사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2017. 1. 8.

■北, 김정은 생일 경축행사 보도·도발 없었다(연합뉴스)

-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생일인 8일, 이와 관련한 보도를 올해도 내놓지 않았음.
- 기념행사가 있었다는 소식은 물론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 사실도 전해지지 않았음.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비롯해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등 관영 매체는 이날 김정은 생일과 관련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음.

■北 외무성, ICBM 임의의 시각 장소서 발사될 것(연합뉴스)

- 북한이 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발사될 것이라며 위협의 수위를 높였음.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

리와 상대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똑바로 알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함.

- 대변인은 “미국이 마감단계에 이른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로켓·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를 결코 들고 있다”면서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 개발은 미국의 날로 약탈해지는 핵전쟁 위협에 대처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주장함.

2017. 1. 9.

■ 北, 김정은 신년사 관철 각 부문 연석회의 열어(연합뉴스)

- 북한이 당·국가·경제기관·무력부문 연석회의를 열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를 이행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이 밝힘.
- 이들 매체는 9일 “김정은 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당, 국가, 경제기관, 무력부문 일꾼 연석회의가 7일과 8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함.
- 회의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 겸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해 김기남·최태복·박영식·리만건·오수용·곽범기·최부일 당 정치국 위원, 조연준 당 정치국 후보위원 등이 참석함.

2017. 1. 10.

■ 北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서 러시아어 서비스 시작(연합뉴스)

-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9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러시아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힘.
- 중앙통신은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비롯하여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이룩되고 있는 소식들이 홈페이지(홈페이지)에 (러시아어로) 실리게 된다”고 설명함.
- 이로써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외국어 서비스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등 5개로 늘어났음.

■ 北신문, 극기훈련급 근로환경 ‘모범사례’로 선전(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혹한기의 수중 작업 등 ‘극기훈련’ 수준의 열악한 근로 조건으로 인부들을 몰아넣는 공사현장을 ‘모범사례’로 선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철령 아래 고산 땅에 발전소가 건설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고산과수종합농장의 중소형수력발전소 건설에 동원된 인부들의 작업 실태를 상세히 보도함.
- 앞서 노동신문은 지난해 12월에도 북한에서 속도전 사업으로 내세운 ‘200일 전투’기간 황해남도의 한 수로 공사 구간에서 인부들이 목숨을 걸고 붕괴 위험이 있는 터널에 진입해 작업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음.

2017. 1. 11.

■ 北, 백두산에 김씨 3부자 우상화 기념비 세우기로(연합뉴스)

- 북한이 백두산에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부자 우상화를 위한 기념비석을 세우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올해 김씨 3부자에 대한 대대적인 우상화 작업을 위해 조직된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가 지난 8일 공모문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고 전함.

■ 北, 김정은생일 민족명절 내부지시...지역따라 소규모 선물(연합뉴스)

- 북한이 올해 김정은의 생일(1월8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준비하라는 내부지시를 내리고 지역에 따라 차등을 뒤 소량의 선물 배급(명절 공급)을 실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음.
- 하지만, 지시 하달이 늦게 이뤄지는 등 준비가 부족했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선물배급은 ‘소박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 11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북한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김정은 생일을 맞아 북한 당국이 “겉으로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정치행사들이 있었다”면서 혜산시에서는 세대별로 “명절공급으로 도루묵 2kg, 식용유 1병과 중국 고량주를 1병씩 줬다”고 전함.

■ 자본주의는 흥내뒀나...北, 유엔제재받은 조각상 수출 홍보(연합뉴스)

- 북한이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조각상 수출이 유엔의 제재 대상에 오르자 자국산 조각상의 ‘인기’를 한껏 강조하고 나섬.
- 북한의 문예 월간지 ‘조선예술’은 지난달 5일 발간된 최근호(2016년 제12호)에 ‘기념비 조각 창조를 통한 대외미술활동이 가지는 의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조각상 수출 현황을 소개한 것으로 11일 확인됨.

- 기사는 북한이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흉내 낼 수도 없는 기념비 조각 창조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며 각국에 건립한 조각이 그 나라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주장함.

2017. 1. 12.

■ ‘폐쇄 국가’ 북한, 중국 SNS 통해 체제 홍보 나서(연합뉴스)

- ‘폐쇄 국가’ 북한이 체제 홍보를 위해 중국의 소셜네트워크(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은 인접국인 데다 SNS가 활성화되었고 한국인들이 많이 접할 수 있어 북한으로선 체제 선전에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임.
- 진창이(金强一) 연변대 국제정치연구소 소장은 “kp로 시작하는 도메인은 한국에서 접속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중국을 우회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한국인들이 보도록 겨냥해 체제 선전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7. 1. 7.

■ 北매체, 위성 연이어 날아오를 것…장거리로켓 위협(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생일을 하루 앞둔 7일 앞으로 장거리 로켓을 계속 쏘아 올리겠다고 위협함.
- 북한의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이날 ‘2016년 세계를 뒤흔든 10대 조선 충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해 2월 인공위성 ‘광명성 4호’ 발사를 거론하며 “주체 조선의 위성은 승리의 불변궤도를 따라 앞으로도 당 중앙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만리 창공을 헤가르며 연이어 우주로 향해 날아오를 것”이라고 밝힘.
- 방송은 “광명성 4호 발사의 완전 성공, 이는 천하제일 강국으로 치솟아 오르는 조선의 다계단 비약의 산 증거였다”면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만리 창공에 뚝뚝하게 자랑차게 주체의 위훈을 새겨가는 조선의 존엄이었다”고 자랑함.

2017. 1. 10.

■ **北매체 “김정은 자책성 발언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주장(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10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한 ‘자아비판’ 성격의 발언을 두고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포장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의 신년사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역사적인 신년사를 하시며 조국과 인민 앞에 엄숙한 맹약을 다지시던 그이(김정은)의 거룩한 모습에서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정화인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위대한 모범을 보았다”고 강조함.
- 앞서 김정은은 지난 1일 발표한 육성 신년사에서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해를 보냈다”며 이례적으로 자책성 발언을 한 데 이어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 충실한 심부름꾼이 될 것”이라고 다짐함.

2017. 1. 11.

■ **北매체 “반기문 당선되면 핵전쟁 위험 고조” 주장(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유력 대권 주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남한의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경색된 남북관계의 개선은 물 건너가고 핵전쟁 위험이 고조될 것이라고 위협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권력 미치광이의 민심 기만놀이’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을 통해 “반기문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앉는 경우 박근혜 역도에 의해 파괴된 북남(남북) 관계가 개선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고 핵전쟁 위험만이 고조될 것”이라고 보도함.
- 신문은 또 같은 날 다른 논평을 통해 “미국이 반기문을 음으로 양으로 밀어주고 있다”면서 “친미보수세력을 재집권으로 부추겨 ‘제2의 박근혜 정권’을 조작하고 저들의 침략적인 대아시아 지배전략 실행의 돌격대로 써먹으려고 발광하고 있다”고 궤변을 이어감.

2017. 1. 12.

■ **北, 김정은 인민관 체질화해야..간부 기강 잡기(연합뉴스)**

- 북한이 “인민의 충복,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를 따르라며 간부 기강 잡기에 나선 모양새임.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자 2면에 게재한 ‘올해의 전민 총돌격전에서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의 숭고한 인민관, 인생관을 체질화해야 한다”며 인민을 위한 ‘떨사복무’를 독려함.
- 사설은 김정은이 “세상에 부럼 없으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역사 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 분투할 것”, “인민의 참된 총복, 충실한 심부름꾼이 될 것”이라고 한 신년사 대목을 모든 일꾼들이 ‘심장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함.

■ 北, 김일성 삼촌까지 끌어들이 ‘김정은 충성’ 독려(연합뉴스)

- 북한은 12일 김일성의 삼촌인 김형권까지 끌어들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독려함.
- 북한 노동신문은 김형권 사망 81주기를 맞아 낸 기사에서 김형권에 대해 “수령의 영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보여주었다”면서 “군대와 인민이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자”고 보도함.
- 김형권은 지난 2010년 우리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는데, 김일성의 삼촌이라는 점이 논란이 돼 국가보훈처는 현재 서훈 취소를 추진하고 있음.

■ 北 “친미사대는 재앙, 친북 동족은 통일번영의 길”(연합뉴스)

- 북한이 오는 20일(현지시각)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우리 정부에 대미정책 전환과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함.
- 북한의 대남단체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12일 대변인 성명에서 “남조선 당국은 미국에 의존하여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우매하고 천박하고 암둔한 환각에서 깨어나야(깨어나야) 한다”면서 “친미사대 행각은 재앙의 구렁텅이이고 친북동족행은 통일번영의 길”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성명은 “남조선 당국은 ‘북핵폐기(폐기)’가 아닌 미핵폐기로 정책전환을 해야 하며 친미가 아닌 반미에서 살아나갈 출로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2017. 1. 13.

■ 北, 김정은 결심이 곧 우주개발 목표...우주정복 활로 열것(연합뉴스)

- 북한은 ‘인공위성’의 제작·발사를 비롯한 우주개발 사업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의 결심에 달렸다고 주장함.

-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연구사는 13일 보도된 북한 대외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원수님(김정은)의 구상과 결심은 곧 우리 공화국의 우주개발 목표이고 전망”이라고 밝힘.
- 최근 북한 매체들은 광명성 4호 발사를 거론하며 “주체 조선의 위성은 승리의 불변궤도를 따라 앞으로도 당 중앙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만리 창공을 헤가르며 연이어 우주로 향해 날아오를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음.

■ 北, ‘고별연설’ 美오바마에 “패자의 물골” 악담(연합뉴스)

- 북한은 13일 퇴임을 앞두고 최근 고별연설을 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겨냥해 “패자의 물골로 백악관을 떠나게 되었다”고 악담을 퍼부었음.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중지부가 찍힌 일방적인 핵위협 공갈의 역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바마가 곧 미국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며 이같이 비난함.
- 조선신보는 “일시적인 위기모면을 위한 겉치레식 대화를 해도 대결구도는 바뀌지 않는다”며 “그릇된 과거와 대담하게 결별하는 전략적 결단만이 미국의 출로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함.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 관계

2017. 1. 11.

■ 대북제재로 인한 北 외화수입 손실규모 2억달러(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로 인한 북한의 외화수입 손실규모는 9개월간 2억 달러(약 2천409억 원) 수준이라고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분석함.
- 이 연구원은 10일 공개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효과 평가’ 자료를 통해 “제재시행 이후 9개월(작년 3~11월)간 대중 수출과 외화벌이의 동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억 달러의 외화수입 손실이 있었다”며 “외화손실액 2억 달러는 2015년 북한의 총수출액 27억 달러의 7.4% 수준”이라고 밝힘.
- 연구원은 “외화수입 손실 보전을 위한 상납금 수시 강요와 노력동원 확대 등 주민수탈이 증대됨에 따라 민심이반이 심화하고 있다”며 “당과 군 등 핵심기관 들마저 자금난으로 운영경비 부족과 사업 차질을 빚고 있어 기관 간 이권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밝힘.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7. 1. 13.

■ 北, 4월까지 국경경비대 특별경비기간...탈북자 차단(연합뉴스)

- 북한에서 새해를 맞아 국경경비 강화를 위한 지휘관 결의대회가 열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 6일 각 국경경비대 여단 본부에서 김일성의 생일이 있는 올해 4월까지 단 한 명의 탈북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국경을 철용성으로 지키겠다는 국경경비대 지휘관들의 결의대회가 열렸다”고 RFA에 전함.
- 또 RFA는 탈북자가 넘어간 것으로 확인된 구간의 경비대 지휘관들은 노동당에서 제명되고, 생활제대(불명예 전역)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경고가 국경경비대에 하달됐다고 전함.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7. 1. 7.

■ 北청년들, 김정은 ‘친위부대’ 지원 기피(연합뉴스)

- 최근 북한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친위부대’ 지원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고위 소식통은 RFA에 “지난해 함경북도에서 고급중학교(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김정은 친위부대원 선발 사업을 벌였으나 지원자를 찾기 힘들었다”고 전함.
-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 시대에는 학생들 대부분이 친위부대에 가기를 선택했지만, 지금은 김정은 경호에서 사소한 문제가 생기면 본인은 물론 가문이 멸살당할까 두려워서 지원을 꺼리는 것으로 전해짐.

2017. 1. 12.

■ 북한군 기강해이 극심…부대 철문 떼가고 전단 뿌리고(연합뉴스)

- 김정은 정권 초기에 수도 평양을 방위하는 군부대에서 전단이 살포되는 등 북한군의 기강 해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남.
- 12일 연합뉴스가 한국내 북한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인 ‘조선개혁개방위원회’로부터 입수한 ‘4월 중 집행위원들에 대한 당 생활평가’라는 제목의 2013년 인민군 3군단 내부 문건은 “지난 기간 부대 청사 안에서 컴퓨터(컴퓨터) 도난과 빼라(전단) 살포 등 비정상적인 문제들이 제기된 교훈이 있으나 현재까지도 지휘부안의 대책을 강하게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함.
- 이어 “4월만 하여도 울타리 철문과 객실 물자분실, 세멘트(시멘트) 도적질 현상이 자주 제기되어 부대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언급함.

■ 북한서 남한 식재료·주방기구 유행…南드라마 영향(연합뉴스)

- 북한에서 당국의 금지에도 중국을 통해 유입된 우리나라의 식재료와 주방기구가 유행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함.

-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RFA에 “중국 현지공장에서 생산되는 남한의 유명상표 라면도 겉포장에 한자만 쓰여져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지 없이 수십, 수백 지함(상자)씩 반입되고 있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이런 남한 식자재들은 대부분 평양의 식당들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북한에서는 전혀 생산되지 않는 것들”이라며 “남한산 식자재들은 대부분 상표만 간단히 제거하면 세관을 통과하는 데도 그다지 시끄럽지(어렵지) 않다”고 덧붙임.

■ 데일리NK, 북한 평남서 옮겨올 첫 AI 발병(연합뉴스)

- 평안남도 순천시에서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했다고 북한 관련 전문매체 데일리NK가 소식통을 인용해 12일 보도함.
-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평안남도 순천시의 한 농촌 마을에서 지난해 12월 중순 닭 설사병이 퍼지면서 순천시 수의 방역소에서 집중검사를 진행했다”며 이후 조류 인플루엔자가 맞다는 최종 검사결과가 나왔다고 데일리NK에 밝힘.
- 특히, 북한 당국은 이번 AI 발병과 관련해 평안남도 ‘운곡주석목장’에서 사육하는 가금류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함.

2017. 1. 13.

■ 북주민 대다수가 한 달에 한 번은 외국매체 접해(연합뉴스)

- 북한 주민 대다수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외국 매체를 접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2일(현지시간) 북한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 3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게재함.
- 이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6명은 매일, 12명은 일주일에 한 번, 15명은 한 달에 한 번 외국 매체를 접한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91.6%(33명)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외국 매체를 접하는 셈임. 연구소 측은 북한 주민들이 어떤 외국 매체를 접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음.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1. 9.

■ **美, 北ICBM 발사위협에 “확장역지력 포함 동맹 철통방어”(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8일(현지시간) 북한이 언제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나선 데 대해 도발 중단을 촉구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철통 방위 공약을 재확인함.
- 저스틴 히긴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에 “도발적 행동을 삼가고, 대신 (비핵화에 관한)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힘.
- 히긴스 대변인은 또 “우리는 확장역지 능력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요소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 우리 동맹들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함.

■ **미국무부, 北ICBM 위협에 “탄도미사일 방어능력 개선중”(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8일(현지시간) 북한이 언제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할 수 있다고 위협한 데 대해 “미국은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개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함.
- 저스틴 히긴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VOA의 논평 요청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ICBM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힘.
- 히긴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최근 개량형 지상 발사 요격미사일인 CE-11 실험에 성공했다”며 “북한과 같은 나라의 제한적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개선하는 데 적절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설명함.

■ **카터 미국방 “北미사일, 美 동맹 위협하면 격추할 것”(연합뉴스)**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8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위협과 관련, “만약 그것이 우리를 위협한다면, 또 우리 동맹이나 친구 중 하나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격추할 것”이라고 밝힘.
- 카터 장관은 이날 미 NBC방송의 ‘밋더프레스’ 인터뷰에서 “국방부의 임무는 북한보다 한발 앞서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앞서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ICBM이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발사될 것이라며 위협의 수위를 높였음.

2017. 1. 10.

■ **北, 아주 잔혹한 정권중 하나…트럼프, 北에 단호하게 나갈것(연합뉴스)**

- 미국 공화당 소속 데빈 누네스(캘리포니아) 하원 정보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북한을 아주 잔혹한 정권 중 하나라고 규정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하고 단호하게 나갈 것이라고 밝힘.
- 누네스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향후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함.
- 누네스 위원장은 대북 선제공격 시나리오에 대해선 “테이블(옵션)에서 절대 삭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국에 한국인들을 방어하는 막대한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임. 한·일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면서 “우리는 이미 역지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힘.

■ **백악관, 美 동맹국 방어능력 확고…필요시 사용할 준비돼(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언제 어디서든 발사하겠다고 위협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상당한 방어능력을 지니고 있고 필요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힘.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적인 발언에 대해 국제사회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한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 그러면서 어니스트 대변인은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하는데 있어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필요할 때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함.

■ **페리 전 美국방, 北 미사일 시험 막아야…격추도 한 방법(연합뉴스)**

- 북한이 이미 한국과 일본을 위협할 무기체계로서의 장거리미사일을 갖고 있는 만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은 반드시 막아야 하며, 공해상에서 격추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윌리엄 페리(90) 전 미국 국방장관이 밝힘.
- 페리 전 장관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북한전문매체 ‘38노스’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북한의 ICBM 시험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분명한 방법은 공해상 격추일 것”이라고 답함.
- 그는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고 결국 어떻게 할지는 (미국)군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부연한 뒤 “정치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북한 ICBM) 시험을 막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함.

2017. 1. 11.

■ **미국방장관 “北ICBM, 위협 안되면 격추까진 필요없어”(연합뉴스)**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이나 동맹국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요격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음. ‘격추’에 방점을 찍은 이틀 전 강경발언에서 한발 물러난 발언임.
- 1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카터 장관은 이날 임기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이 위협적이면 요격하겠지만 위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반드시 요격할 필요는 없다”고 말함.
- 그는 “우선 요격 미사일 재고를 아끼고 다음으로 (북한 미사일의) 비행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며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요격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는 발언의 이유를 설명함.

■ **美공화의원, 국방장관에 北ICBM 저지할 무력사용권 줄 것(연합뉴스)**

- 미국의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차기 ‘트럼프 정권’의 국방장관에게 북한 핵프로그램을 저지할 무력 사용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함.
- 10일(현지시간) 미 매체 워싱턴이그재미너에 따르면 그레이엄 의원은 전날 미 평화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미국 타격을 막기 위한 무력사용 권한”을 의회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에게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 그레이엄 의원은 12일 열리는 상원 국방위원회에서 무력사용권 제안을 할 것이라고 설명함.

2017. 1. 12.

■ **떠나는 오바마 각료들, 트럼프에 일제히 “북핵은 우선사안”(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물러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각료들이 일제히 트럼프 당선인에게 북핵 위협은 우선순위라며 정권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나섬.
- ‘안보 총사령탑’인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존 케리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테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공개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역설함.

-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핵심 참모들도 북핵 문제를 실질적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우선순위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美, 北미사일 감시 위해 해상기반 X-밴드레이더 배치(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시하기 위해 해상기반 고성능 레이더를 배치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11일(현지시간) 익명의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함.
- 이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이후 나온 미국의 첫 군사적 대응임.
- 이번에 배치된 해상기반 X-밴드 레이더(Sea-Based X-Band Radar:SBX)는 장거리 미사일을 탐지하고 관련 중요 데이터를 제공함.

2017. 1. 13.

■ **바이든 “북한 핵·미사일, 국제안보에 점증하는 위협”(연합뉴스)**

-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개발이 점점 더 크게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지적함.
- 1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부통령은 전날 카네기국제평화재단에서 핵안보를 주제로 한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이 확장됨에 따라 국제안보와 미국의 국방에 점증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힘.
- 그는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한 2건의 대북제재 결의가 “지금까지 북한에 가해진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제재”라며,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인식시키기 위해 모든 사람이 이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나. 북·중 관계

2017. 1. 7.

■ **중국 일부 지방정부, 새해 대북사업 적극 추진(연합뉴스)**

-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비롯듯 일부 중국 지방정부가 2017년 새해에도 북한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함.

- VOA는 이날 “중국 지린(吉林) 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가 지난 5일 국제물류기지 조성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북한 접경 지역에 세관 1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함.
- 중국 정부는 대북제재를 전면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방정부는 대북 경협에 속도를 내고 있어 대조적이라고 VOA는 지적함.

2017. 1. 9.

■ **중국, 북한 ICBM 발사 위협에 “깊이 우려”(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위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등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북한의 ICBM 발사까지 이뤄질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 관계가 더욱 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외무성이 ICBM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하자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격추하겠다고 반응한 것에 대해 “우리는 유관 보도를 들었고 이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힘.

다. 북·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북·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1. 9.

■ **北외교관 밀수 4억원짜리 롤스로이스, 방글라데시 세관에 압수돼(연합뉴스)**

- 방글라데시 정부가 지난해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이 밀수하려다 적발된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압수함.
- 9일 AFP 통신에 따르면 모이눌 칸 방글라데시 세관 조사정보국(CII) 국장은 지난해 8월 추방된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주재 북한 대사관 한선의 1등 서기관이

- 외교적 사용 명목으로 관세를 내지 않고 들여와 자국 내에서 판매하려 한 롤스로이스 ‘고스트’ 승용차를 압수했다고 밝힘.
- 2015년 5월에는 다카 주재 북한 대사관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북한 식당이 비아그라와 술을 불법적으로 팔다가 당국에 적발돼 영업이 중단되기도 했음.

■ 교황 “北 핵실험, 핵무장 경쟁 유발”...중단 촉구(연합뉴스)

- 프란치스코 교황이 9일(현지시간)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이 새로운 핵무장 경쟁 위험을 초래해 전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함.
-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주바티칸 대사들을 상대로 신년 외교정책 연설을 하면서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난민 사태, 저성장 문제, 폭력적 극단주의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북한 핵문제를 언급함.
- 교황은 난민 문제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종교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살인적인 광기 등에 직면한 유럽이 정체성을 확립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로 핵무장 경쟁을 지적함.

2017. 1. 11.

■ 北 유엔분담금, 전체 유엔 예산의 0.005%(연합뉴스)

- 북한의 유엔 재정분담금이 비율상 20여 년 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1일 보도함.
- 유엔 사무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2017년도 분담금은 12만6천114달러(약 1억5천만원)로 유엔 전체 예산의 약 0.005%였음.
- 1994년 북한에 할당된 분담금은 50만8천644달러였음. 당시 유엔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은 0.05%로, 비율만 놓고 봤을 때 북한의 올해 분담금은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것임.

■ 교도통신 “北, 유엔에 제재결의 근거 검증 조직 설치 요청”(연합뉴스)

- 북한이 유엔에 대북제재 결의의 법적 근거를 검증할 국제 포럼 설치를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11일 전함.
- 미국의 포럼 참여도 인정하겠다는 것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정권에서 대화를 재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통신은 분석함.
- 통신은 북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자성남 주(駐) 유엔 북한 대사가 1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프리 켈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과 회담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의 법적 근거를 검증할 국제 법률전문가 포럼 설치를 요청했다”고 보도함.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1. 7.

■美전문가들, 北 5차핵실험 기폭지점 지하 800m이상 추정(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 지표로부터 800m 이상의 깊은 지점에서 실험용 핵무기를 터뜨렸을 것이라고 미국의 지질학 전문가들이 추정함.
- 미국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 지질물리학 연구단의 프랭크 페이비언 명예연구원과 데이비드 코블린츠 선임연구원은 6일(현지시간) 북한전문매체 ‘38노스’ 기고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함.
- 페이비언 명예연구원과 코블린츠 선임연구원은 또 5차 핵실험으로 생긴 폭발력을 11.9~23.7kt으로 추정함. 핵실험 당시에는 지진과 분석 등을 통해 폭발력이 1만t(10kt) 이상이라고 알려졌음.

2017. 1. 8.

■北 핵·미사일 개발 ‘속도전’...연말까지 ICBM 개발 목표(연합뉴스)

-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가 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올해 말 혹은 내년 초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핵무기 소형화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태 전 공사는 ‘북한은 언제까지 ICBM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냐’는 질문에는 “북한 내부적으로 2017년 말, 2018년 초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전환기를 이용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공격능력과 핵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무기 소형화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
- 앞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지난 1일 2017년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며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과시한 바 있음.

2017. 1. 11.

■日방위상, 北 ICBM 실용화 못해...대기권 재진입기술 검증인돼(연합뉴스)

-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발사실험을 시사하는 대륙간탄

도미사일(ICBM)이 실용화에 이르지 않는 단계라고 말함.

-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나다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적어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북한이 지금까지의 미사일 발사에서 실제로 검증할 수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
- 이나다 방위상은 다만 “북한이 작년 3월 ICBM의 탄두부의 대기권 재진입 환경 모의시험을 실시했다고 공표하고 있으니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려고 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설명함.

■ 국방백서에 ‘핵탄두’ ‘ICBM’ 첫 언급…핵미사일 ‘전략군’ 1만명(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치적 과시용 건설 임무를 전담하는 공병 군단과 도로건설군단 등 군단급 부대 2개를 인민무력성 산하로 개편 창설한 것으로 나타남.
- 병력은 육군 8만명과 핵·미사일 전담 ‘전략군’ 1만명이 각각 늘었으나 공군은 1만명이 줄어 전체 병력은 8만여명이 증가한 128만여명으로 평가됨.
- 국방부는 11일 지난 2년간 변화된 북한군 동향을 상세히 반영한 ‘2016 국방백서’를 발간함.

2017. 1. 13.

■ 美CIA국장 내정자, 北 사이버기술 향상…공격적 작전 기능(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인 마이크 폼페오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사이버 능력이 향상됐다고 평가함.
- 그는 “북한과 같이 기술이 정교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던 나라들이 이제는 공격적 사이버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사이버 해킹에 필요한) 낮은 기술적 진입장벽을 극복했다”고 말함.
- 그러면서 “미국은 (이들 국가에 맞서 사이버 분야에서) 결정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현명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임.

■ 주러 北대사, 현지언론 인터뷰서 “임의시각에 ICBM 발사가능”(연합뉴스)

- 김형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고 지도부 결정에 따라 임의의 시각, 장소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할 수 있다’는 평양의 입장을 재확인함.

- 김 대사는 지난 11일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함.
- 김 대사는 북한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비롯해 자신들을 겨냥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갯더미'로 만들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주권을 침해 당한다면 선제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함.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1.8		아사히 “美부통령, 黃권한대행에 韓日 관계 평화적 해결 요청”(연합뉴스)
	1.9	외교부 “黃권한대행 트럼프 축하서한, 美신행정부 공조 시발점”(연합뉴스)	
		방미 김관진 “북한 핵·미사일, 美에도 위협…한미공조 중요”(연합뉴스)	
			美 아파치 헬기 24대 한국에 추가 배치…2배로 증강(연합뉴스)
	1.10	대북제재 효과 ‘컬러포스터’ 제작, 美에 전달(연합뉴스)	
	1.11	김관진-플린 “북핵불용-사드 공조” 합의…한미동맹은 찰떡공조(연합뉴스)	
	1.12	윤병세-케리 통화…미국, ‘소녀상 한일갈등’ 중재 시도(연합뉴스)	
외교부, ‘북한은 적’ 美틸러슨 발언에 “대북압박 의지표명”(연합뉴스)			
1.13		美국방 내정자, 北위협 맞서 동맹과 협력…미군철수 계획없어(연합뉴스)	
	한민구, 트럼프 북핵발언 큰 의미…대북공조 긍정 신호(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1.7		中환구시보, 사드 배치시 중국인들 한국화장품 사지 않을것(연합뉴스)
			中, ‘韓야당의원단 띄우기…홈피 대대적 소개·달력모델 사용(연합뉴스)
	1.8	정부, 中사드 보복에 적극대응…한중FTA 공동위 첫 개최(연합뉴스)	
	1.10		사드 갈등 속 중국, 한국 화장품 무더기 수입 불허(연합뉴스)

		외교부, 中군용기 KADIZ 침범에 “구체 상황 분석중”(연합뉴스)	이어도 해상 넘보는 중국 관공선…지난해 28차례 출현(연합뉴스)
			中 국방부, 안보이익 존중해야 한국과 군사 교류 재개(연합뉴스)
	1.11		中매체, 군용기 침범에 “이어도는 한·중 EEZ 중첩 구역”(연합뉴스)
			中, 아태안전협력백서 첫 발간…“사드 배치 중단 촉구” 주장 포함(연합뉴스)
			中, 사드배치 강행 정말 원치 않아…강행시 한중관계 훼손(연합뉴스)
	1.12		中매체들 ‘반기문 귀국’ 주목…한국서 검증받을것(연합뉴스)
		7개월만에 한중일 FTA 협상…사드 보복은 논의안돼(연합뉴스)	
		주형환 장관, 중국 ‘사드 보복’ 대응방침 천명(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1.7		日외무상, 소녀상 유감이지만 한국은 전략적 이익 공유 이웃(연합뉴스)
	1.8		아베 “10억엔 냈다…소녀상, 한국이 성의 보여야”(연합뉴스)
	1.9		日외무상, 체코방문서도 위안부 한일 합의 압박…韓 이행해야(연합뉴스)
			부산주재日총영사 ‘소녀상 항의’ 일시 귀국차 출국(연합뉴스)
			주한일본대사 ‘소녀상 항의’ 출국…매우 유감(연합뉴스)
	1.10		日외무상, 일시귀국 주한 일본대사 한국 복귀시점 미정(연합뉴스)
			日언론, 韓반대로 한미일 대잠훈련 무산…우리 軍은 부인(연합뉴스)
		日아소, 또 망언 “통화스와프로 韓에 돈 빌려주면 못받을 수도”(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1.9		中美채, 트럼프 '하나의 중국' 깨면 美와 단교할수도(연합뉴스)
			남중국해 훈련 中 항모 이동 촉각...美 항모와 조우하나(연합뉴스)
	1.11	케리 美국무 "트럼프, 中 대북제재에 두배 더 집중토록 해야"(연합뉴스)	
	1.12	美국무 내정자, 북핵 중대위협...중의 '빈 약속' 더는 수용못해(연합뉴스)	中, 美국무 내정자에 "중국 영토주권·권익 파괴말라" 경고(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1.10	美 日 주한대사 소환에 "외교관 오가는 것 드물지 않은 관행"(연합뉴스)	
			日 방위상 금주 괌 미군기지 방문...사드 부대도 시찰(연합뉴스)
	1.11	美해병대 F-35B 비행대대 日에 배치... 해외 첫 상시배치(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1.7	떠나는 오바마의 경고...푸틴은 우리 편 아니다(연합뉴스)	
		美정보기관,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 만들려고 공작 지시(연합뉴스)	
	7.8		美대선개입 혐의 비슷한 러시아 "근거 없는 확신뿐"(연합뉴스)
	1.9	美공화당 의원 '대선 개입' 러시아 추가 제재법안 제출할 것(연합뉴스)	크렘린궁, 러시아 美대선개입 해킹 비난에 "진저리 난다"(연합뉴스)
		오바마, 러 해킹 영향력 과소평가했다(연합뉴스)	
	1.12	美국무 내정자, 美-러시아 영원히 친구 못돼...대러 제재 유지(연합뉴스)	
		러시아, '크림 병합은 불법' 美국무 내정자 발언에 "동의 못해"(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1.8		중국 해경선, 영유권분쟁 센카쿠 진입...日정부, 中에 항의(연합뉴스)
	1.9	中외교부, 한일 소녀상 갈등에 “日지도자 역사반성 진정성 없어”(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1.13	중·러, 한반도 사드배치에 추가대응...양국 안보회의 결의(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1.8	‘다급해진’ 日아베, 북방영토 문제 해결차 러시아 방문 의향(연합뉴스)	
	1.10		극동지역 영향력 확보...日주변 해역서 러시아 함정 증가(연합뉴스)
	1.12	日아베, 러시아에 공들이기...4.9월 방문, 쿠릴4개섬 협상(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1. 8.

■ 아사히 “美부통령, 黃권한대행에 韓日관계 평화적 해결 요청”(연합뉴스)

-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일본 정부가 주한 대사의 일시 귀국 조치를 발표한 6일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청했다고 아사히신문이 8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바이든 부통령은 전화 통화에서 황 권한대행에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냉엄한 가운데 한미일이 협력해야 한다”며 “한일 양국이 평화적인 외교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함.
- 이날 일본 정부는 부산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항의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 총영사를 일시귀국 조치했었음.

2017. 1. 9.

■ 외교부 “黃권한대행 트럼프 축하서한, 美신행정부 공조 시발점”(연합뉴스)

- 외교부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낼 예정인 축하 서한에 대해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부간 공식 정책 조율 및 공조를 본격화해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 외교부는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취임 축하 서한을 보낼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함.
- 외교부는 이어 “이번 축하 서한은 단순한 취임 축하 메시지 전달을 넘어 한미동맹의 의미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설명 등 실질적 내용을 담은 것이다”라고 설명함.

■ 방미 김관진 “북한 핵·미사일, 美에도 위협…한미공조 중요”(연합뉴스)

-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위협을 주며, 이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 간 공조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8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김 실장은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 이전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한미 안보문제

를) 협의하고 한미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미국을 찾았다”고 말함.

-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김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활동할 마이클 플린 내정자와 만날 예정이냐는 질문에 “아마 카운터파트기 때문에...”라고 답하며 면담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美 아파치 헬기 24대 한국에 추가 배치...2배로 증강(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가 현존 최강으로 꼽히는 AH-64 아파치 공격헬기를 주한미군에 추가 배치할 예정임.
-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주한미군에 아파치 헬기 24대를 새로 투입해 공군 수원비행장(군 공항)에 주둔하도록 할 방침임.
-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미군은 한국에 전개하는 아파치 헬기 숫자를 2배로 늘릴 예정”이라며 “한국군도 아파치 헬기를 확보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는 한국군이 보유하게 될 아파치 헬기와 같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2017. 1. 10.

■ **대북제재 효과 ‘캘리포스터’ 제작, 美에 전달(연합뉴스)**

- 우리 정부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와 함께 그동안 주도적으로 취해온 대북 제재·압박 효과를 시각적으로 정리, 미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짐.
- 1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대북 제재·압박 효과’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제작함. 포스터는 ‘B4’ 크기의 용지에 제재 분야별 효과를 짚막한 글과 그래픽 등으로 알기 쉽게 천연색으로 표현함.
- 지난해 3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국제사회의 다각적 제재·압박으로 북한이 지난해 연말까지 2억 달러 규모의 외화손실을 입었고, 지난해 11월 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따라 북한이 연간 8억 달러의 외화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됨.

2017. 1. 11.

■ **김관진-플린 “북핵불용-사드 공조” 합의...한미동맹은 철떡공조(연합뉴스)**

-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컨트롤타워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도널드 트럼프

- 프 차기 행정부의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북한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실장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플린 내정자와의 전날 회동 결과를 전하면서 이같이 설명함.
 - 김 실장과 플린 내정자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하고도 시급한 안보 현안”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북한 핵을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이런 전제하에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선행을 바꿔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2017. 1. 12.

■ 윤병세-케리 통화··미국, ‘소녀상 한일갈등’ 중재 시도(연합뉴스)

-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 이후 조성된 한일 갈등 국면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1일 전화통화를 했다고 외교부가 밝힘.
- 이번 통화는 한일간 갈등의 조기 수습을 위해 미국이 중재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됨.
-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측 요청에 따라 추진된 이번 통화에서 케리 장관은 한국 정부가 그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최근 한일간에 조성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평가함.

■ 외교부, ‘북한은 적’美틸러슨 발언에 “대북압박 의지표명”(연합뉴스)

- 외교부는 ‘북한은 적’이라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의 인준 청문회 발언에 대해 대북 제재·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함.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틸러슨 내정자는 북한이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대(對) 중국 견인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대북제재·압박을 지속할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함.
- 조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가운데,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끄는 제재·압박을 지속하겠다는 향후 대북정책 방향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함.

2017. 1. 13.

■ **미국방 내정자, 北위협 맞서 동맹과 협력...미군철수 계획없어(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 내정자인 제임스 매티스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미사일 방어능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도발적 언행으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면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정교한 탄도미사일 능력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함.
- 이어 북핵 대응책을 묻는 말에 “미국은 역내 국가, 특히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본토는 물론 그들의 미사일 방어능력도 강화해야 하며, 필요하면 북한의 침략에 대응해야 한다”고 답변함.

■ **한민구, 트럼프 북핵발언 큰 의미...대북공조 긍정 신호(연합뉴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3일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북핵이나 동맹 관련 발언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힘.
- 한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미국 전문가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앞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전달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함.
- 그러면서 “향후 미국 새 행정부와 대북정책 공조나 한미동맹 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함.

나. 한·중 관계

2017. 1. 7.

■ **中환구시보, 사드 배치시 중국인들 한국화장품 사지 않을것(연합뉴스)**

- 중국 관영 매체가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가 이뤄질 경우 중국인들이 한국화장품을 사지 않는 등 강력한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섬.
- 이는 최근 한국 정부가 추귀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하면서 사드 배치 의지를 강력히 보임에 따라 중국 정부가 관영 매체 등을 동원해 압박 작전에 나선 것으로 보임.
- 이 매체는 “한국은 사드 배치를 멈춰야 하며 중국이 사드라는 쓰디쓴 과일을

삼킬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이 미국 꼭두각시가 되겠다고 주장한다면 중국은 이에 대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中, ‘韓야당의원단’ 띄우기…홀피 대대적 소개·달력모델 사용(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 속에 방중했던 야당 의원단이 중국 외교부 싱크탱크에 대대적으로 소개돼 눈길을 끌었음.
- 지난해 방중했던 야당 초선의원들은 중국 싱크탱크의 새해 달력 모델로 이용되면서 ‘사드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로 묘사됨.
- 이는 중국 정부가 이들 의원의 방중을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줌.

2017. 1. 8.

■ 정부, 中사드 보복에 적극대응…한중FTA 공동위 첫 개최(연합뉴스)

-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후 중국의 무역보복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정부가 통상현안을 놓고 처음 만날 예정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제 1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힘.
-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한중 FTA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주된 목표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이 공식·비공식적으로 거세지는 가운데 열리는 첫 회의인 만큼 이에 관한 논의가 주로 오갈 것으로 보임.

2017. 1. 10.

■ 사드 갈등 속 중국, 한국 화장품 무더기 수입 불허(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최근 한국산 화장품이 무더기 수입 불허 조치된 것으로 확인됨.
- 수입 불허로 반품 조치된 한국산 화장품만 11t에 달해 국내 화장품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 7일 ‘한국이 사드 때문에 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제하의 사평(社評)에서 “한국 정부는 중국의 사드 여론을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서울의 백화점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지만 이들 관광객은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인들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으

며 한국이 미국 편에 서기로 선택한다면 한국 화장품 때문에 국익을 희생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음.

■ 이어도 해상 넘보는 중국 관공선…지난해 28차례 출현(연합뉴스)

- 중국 군용기가 침범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인근 제주 남방 이어도 해상에 중국 관공선이 출현하는 일이 잦아 해경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10일 국민안전처 등에 따르면 이어도 인근 해역에 중국 관공선이 지난해 28차례 나타나 2015년 17차례에 견줘 64.7% 늘었음.
-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BEZ) 경계확정 협정과는 별개로 이어도 관할권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보고 이어도에 2003년 해양과학기술기지를 세워 해양 조사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외교부, 中군용기 KADIZ 침범에 “구체 상황 분석중”(연합뉴스)

- 외교부는 10일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의 관련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군사 당국과 함께 분석 중에 있다”고 밝힘.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관련한 압박 등) 중국 측의 여러 조치에 대해 정부는 벌써 오래전부터 중국 내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당국의 대응 노력에 대해서는 “주시하면서 검토하고, 내부 협의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관련업체와 긴밀한 협업을 하고 있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함.

■ 中 국방부, 안보이익 존중해야 한국과 군사 교류 재개(연합뉴스)

- 중국 국방부가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를 겨냥하며 상호 안보이익을 존중해야 한국과 군사 교류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힘.
- 중국 국방부는 10일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에 “중국은 한국과 협력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으며 상호 안보이익을 존중하는 가운데 한국과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함.
- 지난해 7월 한국이 사드 배치를 발표한 뒤 최소 7건의 한·중 군사 관련 행사가 취소되는 등 양국 군대의 공식 교류가 중단된 상태임.

2017. 1. 11.

■ **中매체, 군용기 침범에 “이어도는 한·중 EEZ 중첩 구역”(연합뉴스)**

- 중국 군용기들이 지난 9일 제주 남방 이어도 인근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대거 기습 침범하며 동해로 진출한 데 대해 중국 관영 매체가 이어도는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중첩 구역이라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함.
- 또한, 한국 언론들이 이를 사드 문제와 연관하는 것은 스스로 뒤가 풀리는 심경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함.
- 중국 해군의 량양(梁陽) 대변인은 “해군 항공병이 9일 동해에서 군함 편대와 협동훈련을 시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이는 연례 훈련계획에 따른 것으로 특정 국가나 지역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며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힘.

■ **中, 아태안전협력백서 첫 발간…“사드배치 중단촉구” 주장 포함(연합뉴스)**

- 중국 국무원은 11일 ‘중국의 아태안전협력정책’ 백서를 발표함. 중국이 아태지역의 정책 근간을 소개한 백서 발간은 이번이 처음임.
- 중국은 1만6천 자로 이뤄진 백서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사드 배치는 물론 테러리즘, 해상영유권 분쟁 등에 대한 입장을 소개함.
- 중국은 이어 아태지역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핵심이익은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함.

■ **中, 사드배치 강행 정말 원치 않아…강행시 한중관계 훼손(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11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이뤄지면 한중 관계 훼손이 불가피하다면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함.
-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의 마이클 플라너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회담을 통해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사드를 반드시 배치할 것”이라고 합의한 데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요구받고서 이같이 밝힘.
- 루 대변인은 “중국의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은 모두가 매우 명확히 알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동의한 것이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엄중히 훼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2017. 1. 12.

■ **中매체들 ‘반기문 귀국’ 주목…한국서 검증받을것(연합뉴스)**

- 중국 매체들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반기문 전 총장의 친족이 미국에서 뇌물 문제로 기소된 점도 주목하면서 반 총장이 귀국 후 대선 후보로서 철저한 검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함.
- 앞서 텡쑤(騰訊·텐센트)과 신랑망(新浪網·시나닷컴), 왕이망 등 중국 매체들은 지난달 ‘차기 한국 대통령은 누가 될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일제히 같은 내용으로 반기문 전 총장,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 이재명 성남 시장을 집중 조명한 바 있음.

■ **7개월만에 한중일 FTA 협상…사드 보복은 논의안돼(연합뉴스)**

- 한국·중국·일본 통상당국이 7개월 만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테이블에 앉아 관세·비관세장벽 원칙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1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제11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힘.
-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본격적인 시장접근 협상 개시를 위한 논의를 한층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한·중·일 FTA가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이 되도록 추진하는 동시에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함.

■ **주형환 장관, 중국 ‘사드 보복’ 대응방침 천명(연합뉴스)**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13일 열리는 한중FTA 공동위 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한 사드와의 연관성을 적절하게 제기하겠다”고 말함.
- 통상 정책 책임자인 산업부 장관이 한미간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합의 이후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무역 보복성 행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주 장관은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힘.

다. 한·일 관계

2017. 1. 7.

■ 日외무상, 소녀상 유감이지만 한국은 전략적 이익 공유 이웃(연합뉴스)

-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이 자국의 주한대사 일시귀국 등의 조치와 관련, 부산의 소녀상 설치에 유감이지만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라고 입장을 밝힘.
- 프랑스를 방문 중인 기시다 외무상은 6일(현지시간) 일본 기자들에게 “소녀상 설치가 극히 유감이라는 우리 나라의 입장을 보여주고 (소녀상 설치 문제와 관련해) 본국에서 의논을 하기 위해서 대사를 일시귀국 조치했다”고 설명함.
- 그는 이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유감이지만, 일본에 있어서 한국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인상은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임.

2017. 1. 8.

■ 아베 “10억엔 냈다…소녀상, 한국이 성의 보여야”(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따라 10억 엔의 돈을 냈다고 강조하며 “한국 측이 제대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8일 요구함. ‘국가의 신용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에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뜻을 밝힌 것임.
-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방송된 NHK 프로그램 ‘일요토론’에서 부산 소녀상 문제로 위안부 합의가 어그러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성립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것을 서로 확인했다”고 말함.
- 그는 “일본은 우리의 의무를 이행해 10억 엔을 이미 거출했다”고 강조하며 “그다음으로 한국이 제대로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함.

2017. 1. 9.

■ 日외무상, 체코방문서도 위안부 한일합의 압박·韓 이행해야(연합뉴스)

-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이 8일(현지시간) 방문 중인 체코에서 일본 기자들에게 “위안부 합의가 세계의 많은 국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한국에 합의 이행을 압박함.
- 기시다 외무상은 “한일합의로 위안부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공관 앞에 소녀상이 새로 설치된 사태

는 극히 유감”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함.

- 그는 “일본도, 한국도 합의 내용을 이행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일본은 이행을 하고 있어 여기에 이어서 한국측에 소녀상 문제를 포함해 합의 내용의 착실한 실시를 요구하고 싶다”고 말함.

■ 부산주재日총영사 ‘소녀상 항의’ 일시귀국차 출국(연합뉴스)

-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주한일본대사와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가 9일 귀국길에 나섬.
-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총영사는 김해공항을 통해 이날 아침 먼저 본국행 비행기를 탔음.
- 이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정오께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오를 예정임.

■ 주한일본대사 ‘소녀상 항의’ 출국…매우 유감(연합뉴스)

-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가 9일 귀국길에 올랐음.
-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정오께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함.
- 나가미네 대사는 출국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에서는 관계자와의 회의 등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함.

2017. 1. 10.

■ 日외무상, 일시귀국 주한 일본대사 한국 복귀시점 미정(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9일(현지시간) 부산 소녀상 설치 항의 표시로 일시 귀국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 등의 한국 복귀 시점에 대해 “미정”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그는 방문지인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혀 나가미네 대사 등의 복귀 시점은 한국에 대한 4개항의 제재조치에 대한 한국측의 대응을 지켜 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 기시다 외무상은 한국 야당 등에서 위안부 합의 파기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는 세계가 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한국측은 소녀상 철거를 포함한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함.

■ **日언론, 韓반대로 한미일 대잠수함 전투 합동훈련 무산…우리 軍은 부인(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이 제안한 한미일 대잠수함 전투 합동훈련이 국민 여론과 중국의 반발을 우려한 한국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함.
- 이 신문은 복수의 한일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일본이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한국, 미국, 일본 등 3국이 참여하는 대잠수함 훈련을 해상에서 실시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이 시기상조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함.
-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일 대잠훈련을 논의하긴 했지만 초기 단계 논의만 있었으며 훈련의 목적과 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한국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밝힘. 이 관계자는 “한미일 대잠훈련에 대해서는 다음 DTT에서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 **日야소, 또 망언 “통화스와프로 韓에 돈 빌려주면 못받을 수도”(연합뉴스)**

- 야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10일 한일 통화스와프 문제를 거론하면서 통화스와프 체결에 따라 한국에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 지지통신에 따르면 그는 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화스와프 협상은) 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뢰관계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신뢰관계가 없어지면서 (협상 재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함.
- 그러면서 그는 “(한일 합의라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빌려준 돈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며 “스와프 따위도 지켜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주장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1. 9.

■ **中美제, 트럼프 ‘하나의 중국’ 깨면 美와 단교할수도(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파기한다면 중국은 미국과 단교할 수도 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경고하고 나섬.
- 이는 차이잉윈(蔡英文) 대만 총통이 중남미 순방의 경유지인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강력히 경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9일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트럼프가 차이잉윈을 만나지 않는다고 중국이 감사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제하의 사평(社評)에서 “미국과 대만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대만 주변을 전투기로 순찰했으며 중국 항공모함이 통과하기도 했는데 이를 볼 때 중국은 더 많은 군사적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남중국해 훈련 中 항모 이동 촉각…美항모와 조우하나(연합뉴스)**

- 미국과 대만이 남중국해에서 훈련 중인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호 전단의 항후 이동경로에 촉각을 세우고 있음.
- 9일 대만 중국시보(中國時報) 등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호는 차이잉윈(蔡英文) 대만 총통이 미국을 경유, 중남미 순방길에 오르면서 군 통수권자가 비어있는 대만에 무력을 과시하기 위해 남중국해에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모항을 칭다오(靑島)에 두고 있는 랴오닝호 전단은 지난해말 서해 훈련에 이어 동중국해, 서태평양을 거침없이 항행하며 남쪽으로 이동해 남중국해에서 함재기 이착륙 등 훈련을 벌이고 있는 중임.

2017. 1. 11.

■ **케리 美국무 “트럼프, 中 대북제재에 두배 더 집중토록 해야”(연합뉴스)**

-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개발한다면 미국으로서는 “더 강경한 방식”을 써야 하게 될 수 있다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경고함.
-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케리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연설한 뒤 질의응답 과정에서 “만약 그(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가 전날 말했던 것처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진전시킨다면 미국은 그가 그의 선택에 따른 영향을 받게 하는 다른 방식, 더 강경한 방식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함.
- 케리 장관은 “다음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북한에 대한) 압력을 키우는 외교적 방법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며, 특히 중국이 “두 배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2017. 1. 12.

■ **미국무 내정자, 북핵 중대위협…중의 ‘빈 약속’ 더는 수용못해(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국무장관 내정자인 렉스 틸러슨은 11일(현지 시간) 북핵 문제를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강력 대처 방침을 밝힘.
- 특히 중국의 대북압박 노력을 ‘빈 약속’(empty promise)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대중 압박을 한층 강화할 것임을 내비침.
- 틸러슨 내정자는 다만 “중국과 긍정적 차원의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양국의 경제적 안녕은 서로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라며 대중 관계 개선 필요성도 언급함.

■ **中, 미국무 내정자에 “중국 영토주권·권익 파괴말라” 경고(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국무장관 내정자인 렉스 틸러슨이 중국에 대해 거침없이 비난을 쏟아내자 중국 정부는 주권 침해를 거론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
-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틸러슨 내정자의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중국 비난 발언에 대해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는 오래전부터 중국 고유 영토”라면서 “미·일이 거론한 미·일 안보조약은 냉전 시대 산물이며 중국의 영토주권과 정당한 권익을 파괴해선 안 된다”고 밝힘.
- 루 대변인은 “미국 측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으로 관련 약속을 지키고 주권 문제에서 편드는 발언을 중단해야 하며 지역 정세를 복잡하게 만드는걸 피해야 한다”면서 “남해(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자신의 영토에서 주권 범위 내의 활동을 진행할 권리가 있으므로 거론할 바가 못 된다”고 강조함.

나. 미·일 관계

2017. 1. 10.

■ **美, 日 주한대사 소환에 “외교관 오기는것 드물지 않은 관행”(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부산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둘러싼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 정부기주한 일본대사와 부산 총영사를 소환조치 한 데 대해 “외교관이 오기는 것과 관련해서 ‘드물지 않은 관행’(not an uncommon practice)”이라고 밝힘.

-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일본의 주한 대사 소환 보도를 봐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변함.
- 그는 더 이상의 언급을 삼간 채 “(한국과 일본) 양국이 그 결정에 관해 얘기하도록 두겠다”고만 말함.

■ 日 방위상 금주 괌 미군기지 방문·사드 부대도 시찰(연합뉴스)

-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이 오는 1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괌을 방문한다고 방위성이 10일 발표함.
- 방위성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방문은 일본 오키나와(沖縄) 주둔 미해병대의 괌 이전 배치 계획의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이나다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북한의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 도입 문제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도 “새로운 장비 도입은 구체적인 (방위) 능력 강화 방안의 하나”라고 말함.

2017. 1. 11.

■ 美해병대 F-35B 비행대대 日에 배치... 해외 첫 상시배치(연합뉴스)

-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가장 먼저 기동하는 일본 항공기지에 수직이착륙 기능을 갖춘 해병대용 F-35B ‘라이트닝 II’ 스텔스 전투기 비행대대가 처음으로 배치됨.
- 미 군사 전문매체 디펜스 뉴스는 10일(현지시간) 미 해병대 사령부 대변인을 인용, 애리조나주 유마의 제121 비행대대(VMFA-121) 소속 F-35B 10대가 전날 일본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시에 있는 미 해병대 항공기지로 출발했다고 보도함.
- 대변인은 공군과 해군도 함께 사용하는 ‘합동 타격기’(JSF)인 F-35가 해외에 상시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면서, 미 본토를 출발한 10대의 F-35B기가 12일 새로운 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다. 미·러 관계

2017. 1. 7.

■ 떠나는 오바마의 경고...푸틴은 우리 편 아니다(연합뉴스)

- 이달 퇴임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편이 아니며, 신뢰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함.

- 오바마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보도된 ABC방송 앵커 조지 스테파노폴로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미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진실은 러시아가 (미 대선에) 개입하려 의도했으며 개입을 했다는 것”이라고 말함.
- 그러면서 “최근 공화당 의원이나 전문가들, 혹은 케이블 방송 해설자들이 민주당 원이라는 이유로 같은 미국 국민보다 푸틴 대통령을 더 신뢰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말함.

■ **美정보기관,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 만들려고 공작 지시(연합뉴스)**

- 미국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이 러시아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돕기 위해 대선개입을 직접 지시했다고 분석한 것으로 파악됨.
- 이 같은 사실은 6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제출된 미 정보기관의 기밀해제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확인됨.
-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 의회 지도부는 기밀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 내용을 보고받았음.

2017. 1. 8.

■ **美대선개입 혐의 비웃는 러시아 “근거 없는 확산론”(연합뉴스)**

- 미국이 정보기관의 보고서까지 공개하며 러시아의 미 대선개입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러시아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전함.
- 러시아 상원 국방안보위원회 소속 알렉세이 푸시코프는 트위터를 통해 “산이 쥐를 낳는다”고 조롱하며 러시아에 대한 모든 혐의는 “확신”과 추정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했음.
- 반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보고서가 공개된 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원이라는 이유로 미국 국민보다 푸틴 대통령을 신뢰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푸틴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강조함.

2017. 1. 9.

■ **美공화당 의원, ‘대선 개입’ 러시아 추가 제재법안 제출할 것(연합뉴스)**

- 미 공화당의 존 매케인(애리조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등 2명의

상원의원이 8일 미 대선에 개입한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힘.

-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의 대러 강경책을 선도하고 있는 이들 2명의 중진 의원은 이날 NBC 방송의 ‘언론과의 대화’에 출연해 자신들이 제출할 초당적인 법안이 차기 행정부에 러시아를 제재할 추가적인 도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두 의원의 법안은 그러나 러시아 대처를 둘러싸고 의회와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간의 이견을 더욱 심화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WSJ은 지적함.

■ 오바마, 러 해킹 영향력 과소평가했다(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 해킹과 관련해 그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경고함.
- 오바마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방영된 ABC 방송 ‘디스 워크’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과소평가했느냐는 질문에 “그를 과소평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함.
- 하지만 그는 “이 새로운 정보사회에 사이버 해킹이 우리 열린 사회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교묘하게 민주주의에 개입 수 있는 정도를 과소평가한 것 같다”고 말함.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간섭하려 했으며, 간섭한 게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함.

■ 크렘린궁, 러시아 美대선개입 해킹 비난에 “진저리 난다”(연합뉴스)

- 러시아는 지난해 미국 대선 과정에 러시아가 해킹을 통해 개입했다는 미국 측의 지속적 비난에 진저리가 난다고 크렘린궁 대변인이 9일(현지시간) 밝힘.
-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비서(공보수석)는 이날 미국 정보기관이 최근 공개한 러시아 해킹 관련 보고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함.
- 페스코프는 기밀 해제된 미국 정보기관들의 보고서는 러시아의 해킹 증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아마추어 수준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비꼬았음.

2017. 1. 12.

■ 美국무 내정자, 美-러시아 영원히 친구못돼…대러 제재 유지(연합뉴스)

- 석유회사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

- 가 11일(현지시간) 상원 외교관계위 인준청문회에서 “러시아가 미국에 위협이 되며 미국의 이익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했다”고 말함.
- 또 러시아를 “가치체계가 완전히 달라 미국과 러시아는 영원히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으며 분명히 비우호적인 적국”으로 간주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 대선 개입을 지시했다는 미 정보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타당한 가정”이라며 사실상 인정함.

■ 러시아, ‘크림 병합은 불법’ 美국무 내정자 발언에 “동의 못해”(연합뉴스)

- 석유회사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의회 인준청문회에서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불법이며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 러시아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비서(공보수석)는 12일(현지시간) 틸러슨 내정자의 인준청문회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이같은 입장을 표명함.
- 페스코프는 “틸러슨의 발언을 파악했으며 러시아는 인내심을 갖고 이 문제의 핵심을 설명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입장(크림병합이 불법이라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우리의 입장을 합당한 근거를 통해 설명해나갈 것”이라고 말함.

라. 중·일 관계

2017. 1. 8.

■ 중국 해경선, 영유권분쟁 센카쿠 진입…日정부, 中에 항의(연합뉴스)

- 중국이 8일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어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열도 인근 수역에 진입했다며 일본 정부가 반발하고 나섬.
- NHK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이전에 중국 해경국 선박 3척이 1시간 반에 걸쳐 일본 정부가 영해로 규정하고 있는 수역에 진입함. 이에 일본 해상보안본부 순시선은 해당 중국 선박에 대해 영해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함.
- 일본은 2012년 센카쿠 열도에 대해 국유화를 선포했으며 이후 이곳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과 끊임없이 영유권 마찰을 빚고 있음.

2017. 1. 9.

■ **중외교부, 한일 소녀상 갈등에 “지도자 역사반성 진정성 없어”(연합뉴스)**

- 중국은 최근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로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본 지도자의 역사반성에 진정성이 없다고 맹렬히 비난함.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소녀상 설치를 두고 한·일 간 갈등이 벌어지는 데 대한 중국 입장을 묻자 “한·일 분쟁에 대해서 말하자면 위안부 문제는 일본 군국주의가 2차 세계대전 기간에 범한 엄중한 반 인류범죄” 라면서 “일본은 이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해야 하며 왜 자꾸 이런 역사적 문제에 대해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느냐”고 지적함.
- 루캉 대변인은 “일본은 역사반성을 할 때 관건이 되는 문제에 대해 자주 애매한 표현을 써왔고 일본 지도자는 진주만 위령제를 참석하고 돌아오자마자 제일 큰 상처를 받은 아시아 국가를 무시하고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러 갔다”면서 “일본 지도자들은 역사 문제를 반성할 때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데 이러면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비난함.

마. 중·러 관계

2017. 1. 13.

■ **중·러, 한반도 사드배치에 추가대응…양국 안보회의 결의(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가 외교안보 회의를 열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반대 의사를 재확인하고 추가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3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전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6차 중러 동북아안전협상’에서 양국의 이익과 지역 내 전략적 균형 보호를 목표로 하는 이런 대응조치들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힘.
- 양국은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의 계속된 한반도 사드 배치 시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확고한 반대를 재확인하고, 이런 우려를 고려해 한반도 사드 배치를 중단하라고 한미 양국에 촉구함.

바. 일·러 관계

2017. 1. 8.

■ **‘다급해진’ 日아베, 북방영토 문제 해결차 러시아 방문 의향(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러시아와 영유권분쟁을 겪는 쿠릴 4개 섬(일본 명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올해 상반기 러시아 방문을 희망한다고 밝힘.
- 8일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 현 시모노 세키(下關)시에서의 신년 후원행사에 참석해 북방영토 문제와 관련, “앞으로도 우리 세대에서 해결한다는 결의를 갖고 논의하겠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러시아를 방문하고 싶다”고 말함. 아베 총리는 작년말 일본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평화조약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결의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성명에 포함됐다”며 “70년간 1mm도 움직이지 않았던 협상에 큰 걸음을 기록한 회담이었다”고 자평함.
- 러시아 정부 관계자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방영토에서의 공동경제활동에 대해 최근 “섬이 러시아 주권 아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해당 지역 주권에 대한 러일 양국 입장 차이 때문에 “협약이 당장은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음.

2017. 1. 10.

■ **극동지역 영향력 확보…日주변 해역서 러시아 함정 증가(연합뉴스)**

- 일본 주변 해역에서 러시아 함정의 움직임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통합막료감부 설치로 육해공 자위대가 통합 운영되기 시작한 2006년 일본 주변에서 러시아 함정이 활동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4건이었음.
- 요미우리는 “러시아 함정이 홋카이도 주변에 자주 나타나는 것은 극동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경계·감시가 급선무인 해상자위대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함.

2017. 1. 12.

■ **日아베, 러시아에 공들이기…4·9월 방문, 쿠릴4개섬 협상(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올해 4월과 9월 2차례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이골리 슈발로프 러시아 제1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러시아경제협력상과의 회담에서 “올해 아베 총리의 러시아 방문이 4월과 9월 2차례 있다”고 밝힘.
- 아베 총리는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아마구치(山口)현에서 열린 신년 후원행사에서 북방영토 문제와 관련 “앞으로도 우리 세대에서 해결한다는 결의를 갖고 논의 하겠다”며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러시아를 방문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함.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1.7	美 인권단체, 김정은 생일에 北 인권유린 책임 물어야(연합뉴스)
	1.10	北 체제변화 대비 '진실위원회' 설립 필요(연합뉴스)
		러 건설현장서 北노동자-현지인 패싸움...북한인 1명 중태(연합뉴스)
	1.11	칠레 민주당 공식행사서 '북 인권' 알린다(자유아시아방송)
	1.12	미국, 북한 개인 7명·기관 2곳 추가 인권제재...김정은 동생 김여정 포함(미국의소리)
		김정은, 아편제배에 10대 동원...탈북자단체, ICC에 증언제출(연합뉴스)
1.13	北서 기독교 적발시 3대가 수용소...최악의 박해국(연합뉴스)	
북한인권 내부동향		
북한인권 남한동향	1.12	정부, 美의 北인권 신규 제재 대상 발표 환영(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1.7	탈북민 19명 지난해 미국 입국...총 211명(연합뉴스)
	1.12	김정은 체제 이후 가족 단위 탈북민 감소세(연합뉴스)
대북지원	1.9	WFP, 지원식품 북 장마당 거래실 확인중(자유아시아방송)
		러시아, WFP 대북 사업에 3백만 달러 지원...중국 50만 달러 지원(미국의소리)
	1.10	유럽 유기농연구소, 대북 유제품생산 지원(자유아시아방송)
		중, 제재 이행 빌미로 대북 구호지원 막아(자유아시아방송)
	1.12	국제 구호단체, 북한 수재민에 65만 달러 지원(미국의소리)
스웨덴, 유엔 대북 사업에 21만 달러 지원(미국의소리)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1. 7.

■ 美 인권단체, 김정은 생일에 北 인권유린 책임 물어야(연합뉴스)

-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오는 8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생일을 계기로 북한 주민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함.
-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단체는 6일(현지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생일 행사는 북한 주민들이 매일 당면하는 끔찍한 인권유린의 현실만 드러낼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방송은 전함.
- 단체는 그러면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가 김정은 독재 정권의 공포정치와 주민의 노예화를 견디지 못해 지난해 7월 한국으로 망명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김정은 정권에서 허가 없이 국경을 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부패가 만연하며 무상 노동 동원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2017. 1. 10.

■ 北 체제변화 대비 ‘진실위원회’ 설립 필요(연합뉴스)

- 유럽의 한 대북 인권단체가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비해 국제사회가 '진실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함.
- 런던에 소재한 유럽북한인권협회(EAHRNK)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유린 피해 진실위원회를 구성, 북한 정권의 붕괴·붕기·개혁에 의한 미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10일 밝힘.
-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진실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며 북한 인권 피해자와 탈북 망명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함.

■ 러 건설현장서 北노동자 현지인 패싸움…북한인 1명 중태(연합뉴스)

- 러시아 중부 타타르스탄 공화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새해 첫날 현지 주민들과 패싸움을 벌여 북한 노동자 1명이 중태에 빠졌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양측의 패싸움은 지난 1일 새벽 타타르스탄 공화국 비소코고르스

- 크 지역 비롤리 마을의 건설현장에서 일어남.
- 공화국 경찰은 “현지 주민들이 새해를 맞아 북한 노동자들에게 삼페인을 갖고 와 나눠 마시는 과정에서 시비가 일었고 곧이어 패싸움으로 번졌다”면서 “먼저 북한 노동자 5명이 현지 주민 1명을 심하게 폭행했고 이에 피해 주민이 친구들을 불러와 북한 노동자들에게 복수했다”고 전함.
 - 러시아에는 현재 극동·시베리아 지역과 수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전국에 약 3만 명의 북한인 노동자가 파견돼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들은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다 수시로 각종 사고를 당하고 있음.

2017. 1. 11.

■ 칠레 민주당 공식행사서 ‘북 인권’ 알린다(자유아시아방송)

- 칠레의 북한인권단체 ‘자유로, 하나로’가 오는 14일 수도 산티아고의 한 극장 (Cine Arte Normandie)에서 개최될 칠레 민주당의 공식 행사에 초대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함.
- 이 단체의 유일한 한국인 이현호 변호사는 칠레 4개 연합 집권당 중 하나인 민주당(Partido Por La Democracia:PPD)의 대규모 정당행사에서 북한인권 설명회를 갖도록 초청받았다고 1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칠레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민주당 정당후보 지명과 인권행사로 정당 소속 의원, 칠레의 각 부처 장관과 차관들, 500여 명의 당원이 참석할 전망이라고 이 변호사는 덧붙임.

2017. 1. 12.

■ 미국, 북한 개인 7명-기관 2곳 추가 인권제재...김정은 동생 김여정 포함(미국의소리)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이 미국 정부의 인권 제재 대상에 추가됨.
- 미 국무부는 11일 의회에 제출한 ‘북한의 인권 유린과 검열 2차 보고서(Report on Human Rights Abuses or Censorship in North Korea)’에서, 김여정 등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자로 지목했고, 재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음.
- 김여정 외에 추가로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은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김일남 인민보안부 함경남도 보위국장,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민병춘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일남 함경남도

보위국장, 강필훈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등임.

- 북한의 기관으로는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 등 2곳이 제재 대상에 포함됨.

■ 김정은, 아편재배에 10대 동원...탈북자단체, ICC에 증언제출(연합뉴스)

- 국내의 한 탈북자단체가 12일 북한 인권탄압 피해자 20명의 증언을 모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출했다고 밝힘.
- 탈북 작가들로 구성된 망명북한펜센터의 이지명 이사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에 살면서 당국으로부터 인권유린을 당한 탈북자 20명의 증언을 모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의 소추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밝힘.
- 이 이사장은 “ICC에 제출한 증언자료에는 10대들까지 학습권을 박탈당한 채 김정은의 통치자금 마련을 위해 아편 재배 등 강제노동에 내몰리고 있고, 아동들이 아편의 독성때문에 실신한 사례 등도 포함됐다”고 말함.

■ 北서 기독교 적발시 3대가 수용소...최악의 박해국(연합뉴스)

- 국제기독교 선교단체가 북한을 16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지목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함.
- 선교단체 ‘오픈도어즈’는 11일(현지시간) 발표한 ‘기독교 박해국 순위’에서 세계 50개국 중 북한을 기독교 탄압이 가장 심한 국가로 꼽았다고 VOA는 전함.
- 북한은 오픈도어즈가 발표하는 종교 박해국 순위에서 무려 16년 연속 ‘선두’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음.

2017. 1. 13.

■ 美차관보 “대북 인권제재, 다른 北관리들에 대한 경고”(연합뉴스)

- 톰 맬리나우스키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최근 2차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발표한 데는 다른 북한 관리들에게 경고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함.
- 맬리나우스키 차관보는 VOA와 인터뷰에서 “(대북 인권제재는) 강제 노동수용소를 운영하고, 정보를 검열하며, 탈북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연루되면 오랜 기간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북한의 모든 당국자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밝힘.
- 맬리나우스키 차관보는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대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해도 대북 인권제재 명단은 계속해서 발표될 것으로 내다봄.

2. 북한인권 내부동향

■ 특이사항 없음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1. 12.

■ 정부, 美의 北인권 신규 제재 대상 발표 환영(연합뉴스)

- 정부는 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대북제재법에 따라 북한 인권문제 관련 2차 제재 대상 명단과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힘.
- 정부는 12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 인권문제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핵심 요소 중의 하나가 될 것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밝힘.
- 논평은 이어 “이번 조치는 인권 실상 왜곡, 검열, 북한 내 강제노동 등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더욱 강화하고 구체적 행동을 독려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함.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1. 7.

■ 탈북민 19명 지난해 미국 입국…총 211명(연합뉴스)

- 탈북민 19명이 지난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해 현재까지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총 211명에 달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함.
- 미 국무부가 6일 갱신한 난민 입국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11월에 가장 많은 6명을 비롯해 3월과 8월 그리고 10월에 각각 3명, 12월 2명, 1월과 2월에 각각 1명으로 총 19명으로 집계됐다고 방송은 전함.
- 이로써 미국 의회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지금까지 모두 211명의 탈북민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함. 이 가운데 여성이 128명, 남성이 83명을 각각 차지함.

2017. 1. 12.

■ **김정은 체제 이후 가족 단위 탈북민 감소세(연합뉴스)**

- 김정은 체제 들어 주민 감시활동이 강화돼 가족 단위로 북한을 탈출해 국내에 입국하는 사례가 줄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음.
- 탈북민 정착지원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은 12일 2015~2016년 전체 탈북민 대비 가족 단위 탈북민 비율은 44%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힘.
- 가족 단위 탈북민 비율은 2000~2002년 38%에서 꾸준히 상승해 2009~2011년 54%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인 2012~2014년에 52%로 상승세가 꺾였고 최근 2년간은 그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었음.

5. 대북지원

2017. 1. 9.

■ **WFP, 지원식품 복 장마당 거래실 확인중(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식량계획의 실케 버 아시아 담당 대변인은 대북지원 식품 중 일부가 장마당에서 헐값에 팔리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힘.
- 버 대변인은 양강도 혜산의 장마당에서 세계식량계획의 영문 약자인 'WFP'라는 글자가 새겨진 영양과자가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를 지난달 접한 뒤 평양사무소를 통해 조사원을 양강도 지역으로 급파했다고 전함.
- 버 대변인은 유엔 식량구호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이 투명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한 북한 내 취약 계층에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임.

■ **러시아, WFP 대북 사업에 3백만 달러 지원...중국 50만 달러 지원(미국의소리)**

-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미화 300만 달러와 50만 달러를 각각 지원함.
- 세계식량계획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의 실케 버 대변인은 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중순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이 같은 자금을 지원 받았다고 밝힘.
- 세계식량계획은 내년 12월까지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1억2천9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힘. 9일 현재 모금액은 2천465만 달러로 목표액의 19% 수준임.

2017. 1. 10.

■ 유럽 유기농연구소, 대북 유제품생산 지원(자유아시아방송)

- 유럽의 대표적인 친환경 농업연구기관인 유기농연구소(FiBL)의 독일 지국은 북한에서 진행하던 두 건의 지원 사업 중 ‘시범농장 운영을 통한 농축산 통합 사업’을 지난해 종료했지만 ‘저예산 유제품 생산 증진 사업’은 내년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프랑크푸르트 지국의 ‘유기 농업 연구소’의 북한 지원 책임자인 루카스 바움가르트 연구원은 지난해 말에 평양 근처에서 시범 농장형태로 진행한 농축산 통합을 통한 영양 개선 사업을 마무리했으며 현재 유제품 증산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함.
- 바움가르트 연구원은 북한의 자연 조건과 환경에 적합한 ‘저비용 고효율’ 축산법 즉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생산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공동 연구를 북한 당국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함.

■ 중, 제재 이행 빌미로 대북 구호지원 막아(자유아시아방송)

- 지난 8월 말과 9월 초 북한 함경북도 두만강 인근지역을 휩쓸고 간 태풍 라이언 록때 발생한 홍수로 해당지역에는 6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넉 달이 지난 지금까지 생활용품 등 각종 구호물품이 절실한 상황임.
- 국제구호단체인 아가페(Agape International)는 북한에서의 활동 및 현지사정을 자체 홈페이지에 소개하면서, 수해지역이 바다와 항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이 어렵다고 밝힘.
- 아가페의 스테판 버크하르트 북한담당관은 “공식적으로 유엔 대북제재 등은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을 허용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대북제재 이행을 내세워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구호 및 지원물품을 자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여가는 것을 막고 있어 지원활동이 상당 부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함.
-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중국은 외국에서 반입해 북한으로 갖고 들어가는 것은 안 되지만 자국 내에서 물품을 구입해 북한으로 들여가는 것은 허용하고 있어, 밖으로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면서 안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모양새라는 관측임.
- 버크하르트 담당관은 또, “이처럼 중국을 통한 구호 및 지원물품 이동이 사실상 어려운데다 북한을 돕는다는 곱지 않은 시선까지 감내해야 한다는 우려 때문에 많은 지원단체와 국가들이 대북지원을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함.

2017. 1. 12.

■ **국제 구호단체, 북한 수재민에 65만 달러 지원(미국의소리)**

-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 홍콩지부가 함경북도 수재민들을 위해 500만 홍콩 달러, 미화 65만 달러를 배정함.
- 옥스팜은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수재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 기반시설 복구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미화 65만 달러를 배정했다고 밝힘.
- 옥스팜은 지난 10월 초 수해 지역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둘러봤다며 특히 무산군의 피해가 심각했다고 밝힘. 무산군 내 주택 2만2천500채가 파괴되거나 물에 잠겼으며, 농경지 5천 862헥타르가 유실됨. 또 최대 12만여 명의 주민이 식량부족이나 영양실조에 걸릴 위험에 처했다고 우려함.

■ **스웨덴, 유엔 대북 사업에 21만 달러 지원(미국의소리)**

- 스웨덴 정부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의 대북 사업에 미화 21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함.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12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자료’에서 스웨덴 정부가 올해 초 이 같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힘.
- 스웨덴 정부는 지난해 북한에 318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제공했으며, 이 중 140만 달러는 스웨덴 적십자사를 통해 국제적십자사의 대북 사업에 지원됨.